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7호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의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을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동시에 대전광역시의 공공시설에 동상·기념비 등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의 종류 중 동상을 추가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동상 또는 기념비의 건립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업무 대행을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lms1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상징물”을 “상징물·동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상 또는 기념비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5조제3항(중전 제2항) 중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을 “제2항에 따른 동상 또는 기념비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제28조의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생략)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과 상징탑·기념비· <u>상징물</u>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 2. ----- ----- ----- ----- ----- <u>상징물·동상</u> ----- ----- |
| 3. ~ 4. (생략) | 3. ~ 4. (현행과 같음) |
| 제5조(건립기준) ① (생략) <u><신설></u> | 제5조(건립기준) ① (현행과 같음) <u>② 동상 또는 기념비 등의 건립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u> <u>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u> <u>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u> <u>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u> <u>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u> |

| | |
|--|---|
| <p>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대상 인물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과 동명, 가로명 등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하여야 한다.</p> <p>제7조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제28조의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 <p>③ 제2항에 따른 동상 또는 기념비는 ----- ----- -----</p> <p>제7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p> |
|--|---|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불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

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

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